



지방자치 정책 Brief

2022. 7.
NO.148

디지털플랫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용방안

유란희 부연구위원

주요내용

디지털플랫폼정부 개념

-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TF의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정부의 개념과 비전을 제시하였음(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, 2022a)
 - ‘디지털플랫폼정부’란,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,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
- 플랫폼 정부(Government as a Platform)의 개념은 “데이터를 공유하고, ICT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, 민간, 시민 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을 통해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열린 장을 마련하는 정부”를 의미함(서형준·주윤창, 2020; 이지형 외, 2020; O'Reilly, 2005)

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정부 수준

- 중앙정부는 각 부처에 산발적으로 활용되고 있던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취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수준에 그쳐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에 미치지 못함
-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디지털 플랫폼 활용의 주요 주체는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나, 실효성 있는 활용이 이루어지기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

지방자치단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제언

-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계획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 수준까지 활용이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
-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기술적 수준, 인구 구성 및 이에 따른 수요 현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수준은 달라질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 정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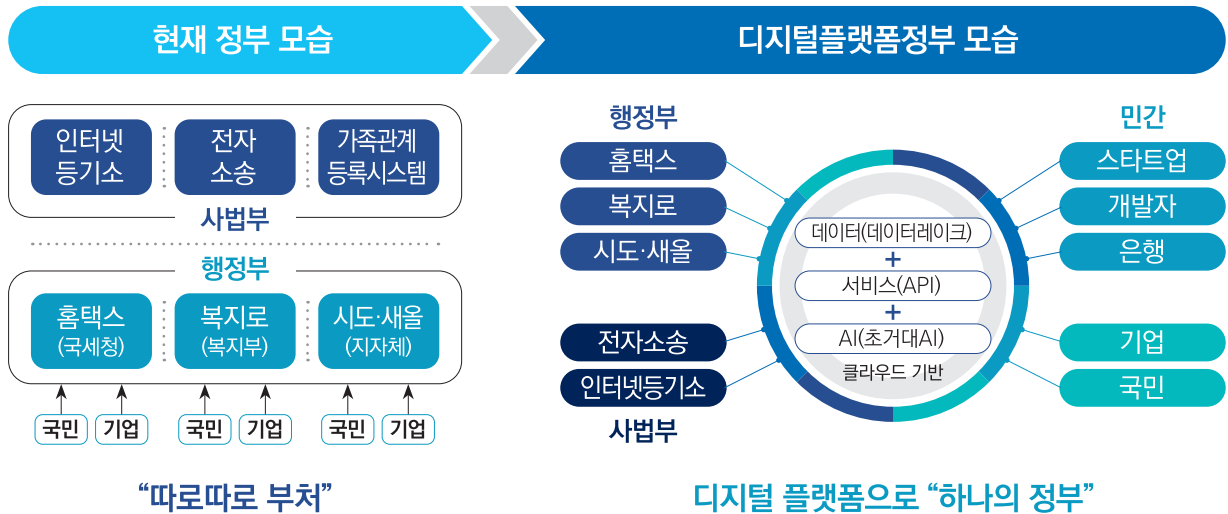
01

새정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

새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

-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이용하는 것으로,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던 공급자에서 민관이 협업하여 혁신을 추구하는 모델을 추구함(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, 2022b)

새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상



자료 :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(2022a),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

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‘디지털 플랫폼’

- 디지털 플랫폼의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서 플랫폼을 활용하는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
 - ① 단기간에 개선효과를 체감하도록 ‘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’, ② ‘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’ 구현, ③ ‘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국정운영’으로의 개편, ④ ‘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’ 조성, ⑤ ‘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’ 보장

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위한 전략 필요

-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,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디지털 격차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발전 전략은 논의되지 못함

0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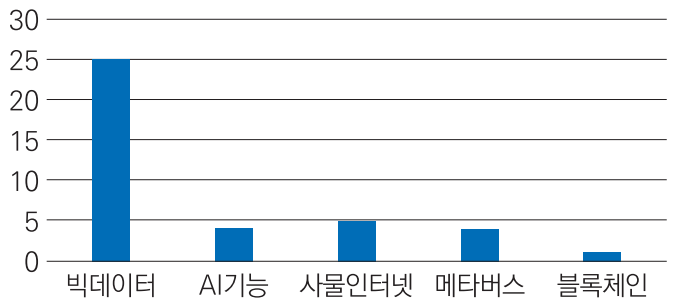
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 인식



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과 기술 수준

- 전국의 광역·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평균적으로 8개 정도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기술로는 빅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, AI 기능이나 사물인터넷, 메타버스, 블록체인 등은 빅데이터 활용의 1/5 수준에 그침(유란희 외, forthcoming)
 - 지역·상황별 복지수요 현황을 제공하거나 복지자원의 분포 정도를 파악하는 데 빅데이터를 활용
 - 그러나 수요와 공급현황을 파악하여 서비스 예측모델을 활용하는 등 선제적·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은 활용되지 못해, 복지체감도 향상으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

■ 광역·기초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기술 활용 수준 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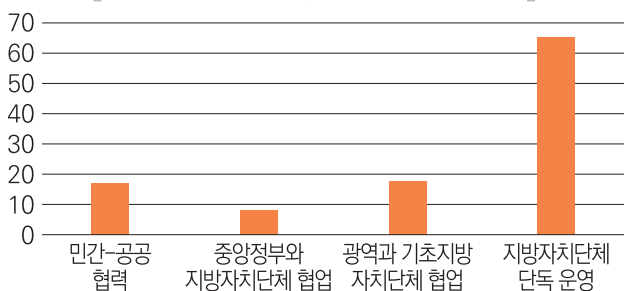
자료 : 유란희 외(forthcoming).



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 주체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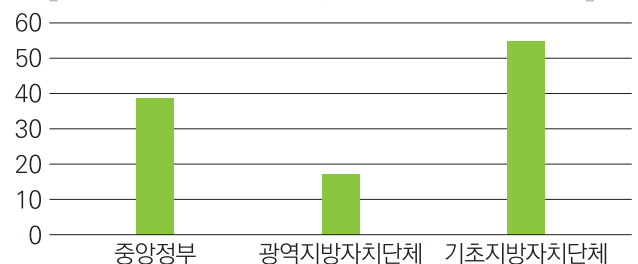
-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운영함
 -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, 차이는 다소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비중 다음으로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경우,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경우,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순서로 운영함
- 향후 디지털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책임 주체에 대한 답변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다음으로는 중앙정부가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
 -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플랫폼 활용을 주도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함
 - 반면,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중장기적 계획과 예산·조직·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다수임

■ 디지털 플랫폼 운영의 주요 주체 현황 ■



자료 : 유란희 외(forthcoming).

■ 향후 디지털 플랫폼 운영의 주요 책임주체 인식 ■



03

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개선 방안



디지털 격차의 해소 필요

-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기 어려운 가장 큰 한계로 고령화로 인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 많지 않으며, 그로 인한 낮은 정책적 필요성을 손꼽았음
- 도시화 지역과 농촌 지역 간에, 고령화된 지역과 젊은 인구 유입과 구성이 많은 지역 간일수록 디지털 격차 심화 경향을 보임



지방자치단체의 현황에 맞는 전략수립 필요

- 부처 간 데이터를 통합한 디지털 플랫폼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에 맞는 전략과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함
 - 데이터가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이 설계되더라도, 이용자가 어려움을 느낀다면 실효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음
-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관리자, 이용 주민 대상의 교육은 물론 실질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 인구가 과밀된 농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플랫폼 활용을 도와줄 인력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
 - 도시형 지방자치단체의 경우, 플랫폼 관리자의 기술습득을 위한 별도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
 - 농촌형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플랫폼이 마련되어도 지역 내 노인계층의 이용이 어려우므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를 지자체 담당자와 대면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인력이 유지되어야 함(예. 복지서비스 수급을 위한 복지코디네이터 제도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 운영)

참고문헌

서형준·주윤창(2020) 플랫폼 정부 관점에서 조명한 국내 COVID-19 대응 정보화 사례: ICT와 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. 한국행정논집. 32(4): 759-796.

유란희·박재희·이경은(forthcoming)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정부(platform government)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연구. 한국지방행정연구원.

이지형·박형준·남태우(2020)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진화? 플랫폼 정부 모델과 전략 분석: '광화문 1번가'를 중심으로. 한국행정연구. 29(2): 61-96.

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(2022a)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.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 발표자료.

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(2022b) 새로운 시대, 새로운 정부, 새로운 혁신을 위한 「디지털플랫폼정부」 추진방향 발표 (보도자료).

O'Reilly, T.(2005) What is Web 2.0.(<https://www.oreilly.com/pub/a/web2/archive/what-is-web-20.html?page=1>)(검색일 2022.04.12.).

내용문의

유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 부연구위원(033-769-9897, lryu@krila.re.kr)

지난호
보기